



동물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

수 신

(경 유)

제 목 아파트 단지 내 길고양이 사료 지원에 대한 협조 요청의 건(총 5장)

1. 귀 기관(관리소)의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(사)동물자유연대는 동물 학대 예방 및 구조,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, 농장동물, 실험동물, 전시동물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중 인식 확산과 연구 조사, 동물복지 정책 협력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.
3. 귀 기관(관리소)에서는 얼마 전부터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습니다.
4. 이와 관련해 아파트 내 길고양이 사료 지원 및 동물보호법에 대한 (사)동물자유연대의 의견서를 첨부하오니 확인 후 협조를 바랍니다. 함께 첨부한 (사)동물자유연대 길고양이 관련 유인물은 길고양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(끝)

※ 붙임 1. 아파트 내 길고양이 사료 지원에 대한 (사)동물자유연대 의견서.

붙임 2. 길고양이 관련 (사)동물자유연대 유인물.

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

담당자 : 장인영 (연락처 : 02-2292-6337, 메일 : changin0@animals.or.kr)

주소 : (우 133-070)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307-18 / 전화 : 02-2292-6337 / 팩스 : 02-2292-6339

대표메일 : animal@animals.or.kr / 홈페이지 : <http://www.animals.or.kr> / 대표 : 조희경 / 공개

<붙임 1>

길고양이 사료 지원에 대한 (사)동물자유연대 의견서

—길고양이와 공존하는 생태적인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해—

1. 사료급여는 쓰레기봉투 훼손을 예방해줄 수 있으며, 고양이 밥을 주는 사람(이하 캣맘)이 TNR(포획→중성화수술→방사)신청도 하기 때문에 개체수 증가와 발정기 울음소리를 점차 없애줍니다.

2. 고양이는 쥐의 포식자로서 전염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.

*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므로 특정한 지역에서 무한번식하지 않으며, 사고나 추위 등으로 인해 평균 수명은 2-3년에 불과합니다. 생명을 중시하고, 공존하는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위해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
1. 길고양이 사료 급여

1)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.

- 먹이를 찾기 어려운 도시 환경에서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급여하는 것은 굶주림을 없애, 쓰레기 봉투를 뜯지 않게 하여 오히려 깨끗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됩니다.
- **길고양이 사료 급여는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.**
-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준다는 이유로 약물 등을 이용해 길고양이를 죽일 경우 동물보호법 제8조에 의거,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2) 길고양이는 전염병을 전파하는 쥐의 강력한 천적입니다.

- 고양이는 불결하고, 전염병을 옮긴다는 편견과 달리, 길고양이의 배설물을 직접 만지지 않는 이상 수의학적으로 고양이가 인간에게 병을 옮기지 않습니다.
- 반면 고양이의 피식자인 쥐는 세균성 식중독(살모넬라증), 리켓치아 질병, 서교열, 렙토스피라증, 아메리카형 수면병, 신증후군출혈열, 선모충증, 페스트(흑사병) 등의 전염성 질환을 옮깁니다.
- 따라서 **쥐를 잡는 고양이는 전염병을 예방함으로써 오히려 위생상 도움이 되는 역할**을 하기도 합니다. 실제로 서울시 종로구에서는 다수의 길고양이를 포획해 길고양이 개체수가 줄어들자 쥐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.

2.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

- 고양이는 영역동물이므로 특정 지역에서 무한 번식하지 않으며, 사고나 추위·각종 질병 등으로 평균 수명이 2~3년에 불과합니다.
- 고양이를 죽이는 것은 개체수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, **특정지역의 길고양이를 잡아 없앨 경우 오히려 타 지역에서 영역구축을 위해 또다른 길고양이가 유입됩니다.**
- 현재 지자체에서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시킨 후, 방사하는 TNR을 실시하고 있으며 캣맘이 개인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고양이는 발정기간에 소음을 내는데 이는 중성화 수술을 통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.
- 길고양이는 사람이 기르다가 버린 유기동물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포획·구조의 대상이 아닙니다.

3.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

- 동물을 학대를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.
- 길고양이 또한 동물보호법의 대상이므로 **죽이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, 동물학대에 해당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.**

<동물보호법>

제8조(동물학대 등의 금지)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
2.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
3.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,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·신체·재산의 피해 등 **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**

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**도구·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.** 다만,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.....

4.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,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·신체·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**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**

제46조(벌칙)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4. 생명 존중의 걸음에 함께 해 주십시오.

- 고양이는 오랜 시간 인간과 함께 살아왔습니다. 잘못된 오해와 편견으로 길고양이를 싫어하거나 학대하는 일이 발생하고 주민간의 갈등이 커지기도 합니다. 길고양이를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. 어긋난 생태계를 원 상태로 돌리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합니다.
- 사회적으로 동물보호와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, 길고양이와 공존하기 위해 캣맘, 동물보호단체 및 지자체가 돌봄·구조·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
- 서울대 수의대의 한 연구원은 "대다수의 캣맘들이 정부와 사회의 보조아래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"이라고 기대했습니다.
- 시민들의 힘을 모아 길고양이와 사람이 더불어 행복해지는 세상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.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.